"수소경제시대 미래 먹거리 전략 마련을"

이병철 도의원, 도정질의서… "에너지 빈국과 확실히 달라 전 세계 각국 간의 경쟁서 이겨내야 하는 고도 전략 필요"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환경복지위·전주5)은 7일 제38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서 '탄소산업을 전북도 100년 먹거리로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하고, "수소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탄소와 달리 부산물이 물뿐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20-30년 후 전북의 미래먹거리 토대 마련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수소경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적 변화이자 신성장 동력으로서 전세계 각국의 치열한 미래 에너지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는 고도의 전략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수소경제시대 새만금을 미래 에너지 메카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도교육청의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혁신교육을 이끌어 온 교육감의 확신이나 의지와 다르게 교사들마저 혁신학교에 대한 확신보다는 의문과 부정의 시각이 상당한 수준이고, 혁신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부터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교육의 장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속성이 없는 혁신학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혁신학교 평가를 바탕으로 혁신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 서열화 폐지와 대학입시 제도의 폐지 없이 중·고등학교 혁신교육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데, 혁신학교 활성화에 걸림돌인 대학 서열화 폐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승환 도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전북도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의 배움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내내 연속성 있는 혁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특히, 중등 혁신학교 연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더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틀 깰 인물 필요"

민주 안호영 의원 도지사 출마 의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전북도지사 선거에 사실상 출마 의사를 내놨다.

안호영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도지사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전북도지사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안 의원은 "전북의 인구와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해 연구할 기회가 많았다"면서 "그간의 중앙 정부·정치와 소통하면서 국가 예산, 필요한 법령을 재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행정관료 출신의 단체장은 안정성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정해진 틀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북은 정해진 틀을 넘어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행정관료 출신 단체장과의 차별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전북도에 보물단지가 돼야하다"면서 "안전과 환경에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기후위기에 관련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북 미래전략을 내놨다.

그는 "기후위기와 4차 산업시대로 가기 위해 정책방향이 나와야 하고 전북도 그런 틀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그중 전북은 수소경제와 관련, 저장과 활용, 운송 등 강점을 지녔고 수소상용차 중심으로 양성화체계, 수소특화클러스터, 그린수소와 연결될 수 있는 정책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대표정책에 대해 밑그림을 그렸다. /뉴시스

"고향사랑기부제 대비 차별화된 전략 필요"

문승우 도의원, "시·군과 협조체계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

고향사랑기부제(일명 고향세)시행을 앞두고, 전북도가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7일 열린 38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고향기부제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제도 정착과 전북도에 많은 기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전략, 답례품 등이 필요하고,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 에게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내 시·군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해 시·군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답변에서 "기부금 접수,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등 일본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 하겠다"며 "전북형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우 의원은 또,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재채용과 관련해 "일부 기관에서 채용의무화 대상의 예외사항을 악용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시·도와의 협력대응을 주문함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원서 접수시부터 지역인재로 응시할 인원들을 따로 구분 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20대 대선공약을 서둘러 마련할 것과, 정부의 메가시티 육성전략에 대응한 전북도의 독자적 광역화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수소트랩 설명 듣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와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 기공식을 마친 후 정의선(오른쪽)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오른쪽 두번째) SK그룹 회장과 전시된 현대로템의 수소트램의 설명을 듣고 있다.

"어민들, 1억200만평 바다 내어주고도 새만금 수산용지는 한평조차 못받아"

올 새만금기본계획 수립시 수산양식장 미포함

지난 1991년 새만금사업 매립허가조건으로 새만금에 수산양식장 2,000ha를 어민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 했으나, 2021년 새만금기본계획(MP) 수립 시 수산양식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농해수위, 김제·부안)이 해양수산부와 농식품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지난 1991년 새만금 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조건으로 어민들을 위한 수산양식장 2,000ha를 확보하기로 했으나, 2001년 새만금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계기관합동으로 수산양식장 조성을 유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전북도와 수협 관계자들은 당초 2,000ha의 수산용지를 300ha로 줄여서 친환경·스마트 양식 용지로 활용하고자 농식품부, 해수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수산용지 반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인근 어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1억2,000만평의 바다를 내어주었는데, 단 한평의 수산용지도 못 받았다"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당초에 약속했던 수산용지가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민들은 농생명용지 일원에 김제·부안·군산 각 100ha씩 총 300ha의 수산용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친환경·스마트, 순환여과 양식을 통해 환경과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호상 기자

"농생명 분야 기반 지방대학 위기 극복"

김정수 도의원, 도정질문서 새로운 농업정책 촉구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 마련과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분야를 기반으로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정수(익산2·교육위원회) 의원은 7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 선진화와 생산 안전성 향상 등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업 특성에 맞는 단기적 전략과 중장기적 전략으로 구분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전북이 가장 최대의 장점은 농생명 분야"라면서 "우리 전북이 혁신성장의 주력으로 삼아야 할 분야는 농생명분야 산업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7월 전북의 농생명 자원을 기반으로 바이오융합산업의 혁신을 이끌겠다며,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바이오 분야는 우리 전북의 혁신성장 주력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명칭만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전문인력 확보 등 조직보강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정수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분야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같아 더욱 가슴아프고 심각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이 손을 맞잡고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관 지역혁신사업(RIS: Regional Innovation Strategy)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은 "지난해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지방대학과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IS 사업 공모에 꼭 성공해야 한다"면서 "우리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분야 특히, 그린바이오를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동부권 시·군에 닥터헬기 추가 도입해야"

이정린 도의원, "응급실 기준 시간 30분 이내 이용률 저조 응급의료 취약"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장, 남원)이 7일 도정질의를 통해 "동부권 6개 시?군의 응급의료서비스가 매우 취약하다"며 "동부권 관내에 닥터헬기 추가 도입 및 지역응급센터 도비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또한, "특히, 동부권 6개 시·군의 경우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응급의료 편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 응급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전북도 응급의료시행계획에 응급실 이용환자가 30분 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 역시 동부권 5군의 경우 10%가 채 되지 않았다.

순창, 임실, 무주의 경우 응급실 기준시간(30분) 내 이용비율이 100건 중 한 건도 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동부권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권역외상센터나 닥터헬기의 응급의료서비스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며 "동부권 관내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동부권 지역 내 닥터헬기를 추가로 배치해 동부권 응급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도내 전체 간호사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동부권 6개 시.군의 간호인력 수급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 해결책으로 도립간호대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정린 의원은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이고, 도내 14개 시·군 대다수가 의료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전국에서 도립대학이 없는 곳은 경기도와 전북이 유일하다. 전북도의 경우 인근에 광역시가 없다 보니 간호학과 졸업생 유입도 한계가 있어 지역 자체적 간호인력 발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소방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고르게 확대를"

민주 한병도 의원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사용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전국에 고르게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 시도본부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362개로 제일 많이 설치됐고, 이어 울산 30개, 강원 27개, 경남 19개, 대전·창원 18개, 경북·세종 17개, 제주 13개, 충남 8개 순으로 나타났다.

18개 시.도본부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8개 시.도본부에는 우선신호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활용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소방차의 골든타임 도착을 좌우할 수 있는 우선신호 시스템이 아예 없는 곳이 있거나, 있더라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소방청은 우선신호 시스템이 전국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도의회 "현대차 울산공장 물량 전주로 이관 결정 환영"

전북도의회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물량의 전주공장 이관 결정을 전북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는 논평을 내고, "전주공장은 7년 전부터 친환경 수입 상용차 증가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생산물량이 급감해 직원 전출과 부품·협력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전북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노사가 7일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물량의 전주공장 이관에 합의했다"면서 "노사의 통 큰 협조로 5,300여 명에 이르는 전주공장 직원의 생존권과 160개 협력사의 고용안정, 나아가 전북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전주와 울산의 상생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울산시민과 현대차 노사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울산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면, 전북도의회가 앞장서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